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중국 성장 전략의 전환과 시사점
 - 양회(兩會)로 본 중국 경제의 향방

발 행 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 행 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중국 성장 전략의 전환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중국, 양회(兩會)개최 예정	1
2. 2014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	3
3. 시사점	11
【HRI 경제 통계】	12

< 요약 >

□ 중국 성장 전략의 전환과 시사점

■ 중국, 양회(兩會)개최 예정

올해 시진핑 정부는 구조개혁의 첫 해로 진입하면서, 3월 개최예정인 중국 양회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人大) 등 두 개의 회의로 구성된 양회는 전년도 연말에 개최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지방 정부 양회에서 나온 사안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

■ 2014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대외개방 정책의 전환, 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등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양회 주요 예상 의제 >

구분	주요 내용
성장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의 하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 및 재정 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 전략 추진 · 서비스·신흥산업 육성 등 산업고도화 · 국유기업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등 시장자유성 확대 · 신형 도시화 장애 요인 제거
대외개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개방 정책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등 시행
대외 경제협력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TPP 등 다원화된 협력 체제 구축

첫째, 성장전략은 구조개혁과 경제성장 속도의 하향 안정화 정책이 병행될 것이다. 시진핑 정부 들어 구조개혁 첫해로 맞이함과 동시에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 가속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 후진타오 정부의 10%대 성장에서 7%대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① **내수활성화 중심의 거시경제 조정**. 구조개혁 가속에 따른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내외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소비는 IT 관련 소비 확대와 에너지절감 제품 소비 촉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고, 도시화 가속으로 고정자산투자도 20%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 제조기업 업황을 대표하는 HSBC PMI가 최근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제조업 업황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서 수출 절차 간소화 확대,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에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② **서비스 및 신흥산업 적극 지원.** 최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 5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축소, 엄격한 산업투자 표준선 적용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과 IT 등 고부가가치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로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12월 4G 서비스 인프라에 약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E-commerce, 클라우드 산업 등 신흥 IT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③ **민간자본 유치 확대.**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민간자본 유입 허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유기업수는 지난 2000년 5만 4,000개에서 2013년 1만 8,000개로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부채규모는 동기간 약 5조 위안에서 21조 위안으로 4배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국유사업 부문에 민간자본 유치를 허용, 부채가 심각한 철도부 해체 등 국유기업의 독점, 부실경영 등에 대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신형 도시화 장애요인 제거.**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약 320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약 5,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스마트 도시 등 혁신형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농민의 토지사용권 보상뿐 아니라, 복잡한 농경지의 건설용지로의 변경 절차, 농민공의 도시 호구 부여 등 신형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둘째, 대외개방 정책에서는 서비스업 유치, 해외 M&A 강화 등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 적극적인 외자유치 전략 및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대외 개방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지난해 출범한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등 내수확대를 위한 서비스업 개방뿐 아니라, 해외 M&A 등 정책 확대로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 902억 달러로 90배가 급증하는 등 대외개방 모델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셋째, 대외 경제협력 전략은 다원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대외 경제협력 전략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TPP)까지 고려하는 등 다원화된 경제영토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홍콩 및 마카오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시작으로 현재 총 12개 지역 및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TPP 참여국 확대로 향후 대외경제 협력 전략을 기존 아시아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로 확대하는 등 TPP까지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성장감속, 대외개방 전략 전환 등 향후 중국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경제의 성장 감속에 대비한 대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IT 등 고부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대중국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기회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스마트형 신형 도시화 가속에 대비한 인프라 건설 참여 등 대중국 진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업 개방, 해외 M&A 확대 등 대외개방 전략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한중 FTA 등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내에서의 경제 입지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

1. 중국, 양회(兩會) 개최 예정

- 시진핑 정부는 올해 구조개혁의 첫 해로 진입하면서, 3월 개최 예정인 양회를 통해 향후 중국경제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할 전망
-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및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등을 일컫는 양회는 올해 시진핑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을 가늠할 중대 의미를 함의
 - 정치협상의 주요 기구이자 국가 정책자문기구 성격을 가지는 전국정치협상회는 오는 3월 3일 제12기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
 -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으로, 법제, 인사 및 예산심의 등을 결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정협에 이어 3월 5일부터 개최 예정
-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성장의 하향 안정화, 대외개방모델 추진, 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등 정책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올해 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초에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지방양회에서 논의된 의제¹⁾를 바탕으로 볼 때, 구조개혁 가속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하향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예상
 - 한편,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등 대외개방 정책 전환과 TPP 등 다원화된 대외 경제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

< 2014년 양회 주요 예상 의제 >

구분	주요 내용
성장 전략	- 경제성장의 하향 안정화 · 거시 및 재정 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 전략 지속 추진 · 서비스·신흥산업 육성 등 산업고도화 · 국유기업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등 시장의 자율성 확대 · 신형 도시화의 장애요인 제거
대외개방 정책	- 대외개방 정책의 전환 · 상해자유무역시범구 등 시행
대외 경제협력 정책	- 대외 경제협력 다원화 가속 · FTA, TPP 등 다원화된 협력 체제 구축

자료 : 18기 삼중전회(2013.11), 중앙경제공작회의(2013.12), 지방정부 양회(2014.1) 등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1) 중국 양회 의제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에서 제시.

【참고】 중국 양회 개혁의제 결정 과정

- 올해 양회는 전년도 연말에 개최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연초에 개최되는 지방양회에서 나온 사안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 결정
-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개혁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산업구조조정, 국가채무 리스크 관리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민생개선, 대외개방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
- (지방정부 양회)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바탕으로 산업구조조정, 신형 도시화 추진, 민생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 정책 방향을 결정
-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앞선 두 회의를 취합해 경제성장 목표, 거시조절 정책 방향,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확대 등 중국경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정

< 2013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2014년 지방정부 양회 주요 내용 >

구분	의제	주요 내용
중앙경제공작회의 (2013. 12)	산업구조조정	- 과잉투자 해소, 서비스업 발전 등
	지방 재정 건전성	- 채무 관리감독 체계 강화
	지역균형발전	- 신형 도시화 추진
	민생개선	- 부패퇴치, 소득증대, 취업, 주택, 호구제도 문제 등
	식량안보	-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대외개방 확대	-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지속 추진 등
지방정부 양회 (2014. 1~2)	산업구조조정	- 과잉투자 해소,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등
	신형 도시화	- 신형 도시화 추진, 농촌인구 호구문제 해결 등
	민생개선	- 소득증대, 주거문제 해소 등
	지방 재정 건전성	- 단기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
	대기환경 개선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방안 모색

자료 : 中共中央政治局 및 지방 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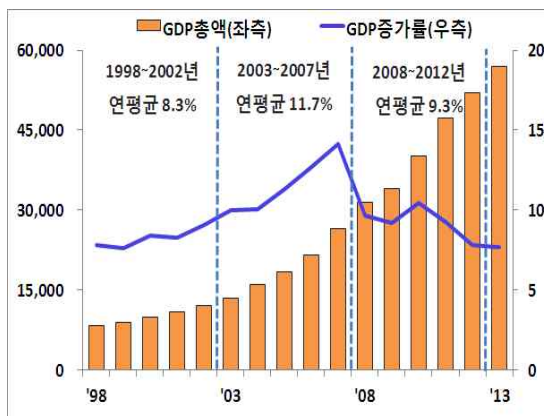
2. 2014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

1) 경제성장 전략 : 성장의 하향 안정화

- 올해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구조개혁의 첫 해로 진입하면서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 가속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하향 안정화될 전망
- 중국경제는 그동안 9%이상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내수확대, 산업 고도화,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의 질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성장 감속이 예상
 - 중국은 과거 10년간 이어온 9% 이상의 고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12년부터 2년 연속 7%대 성장이 지속
 - IMF(2014)와 중국사회과학원(2014)은 2014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모두 7.5%로 전망하는 등 지난해보다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7%대 중반 아래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7.5%로 설정
 - 하지만 올해 2월에 폐막한 지방양회에 따르면, 중국 31개 지방정부 중 23개 성(省)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2013년 대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올해 목표치가 7.0%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

<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

(십억 위안)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 2014년 중국 정부의 성장목표치 조정 >

(단위 : 성(省) 개수)

구분		2013년 대비 GDP성장률 조정		
		상향조정	불변	하향조정
지방정부	동부 (11개)	1개	2개	8개
	중부 (8개)	1개	2개	5개
	서부 (12개)	0개	2개	10개
성장 목표치		7.0~7.5%		

자료 : 각 지방정부의 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① 거시경제 조절 : 내수활성화 추진

○ 구조개혁 가속에 따른 성장둔화가 예상되면서 보조금, 금융지원 등 내·외수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전망

- 내수 활성화 정책 지속 확대 예상

- 통신 서비스, 디지털·스마트제품 등 정보소비(信息消費) 확대와 보조금 등 에너지절감제품에 대한 소비촉진 정책 등으로 올해 소비는 13.5% 정도로 전망²⁾
- 도시화 건설 일환으로 중서부 간선철도, 교통망 확충, 보장성주택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예상, 올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대 지속

- 특히, 제조업 업황부진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 전망

- 최근 중소 제조기업 업황을 대표하는 HSBC PMI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제조업 업황 개선이 지연
-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소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시행된 수출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확대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 중소 제조업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예상

- 한편,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가중 해소를 위해 금융통화정책은 기존대로 탄력적으로 유지될 전망

- 올해 중국의 시중 통화량 증가율은 14%로 예상되면서 물가상승 압박 가중에 대해 지속적인 금융통화정책을 통한 거시조절 예상

< 2014년 중국경제의 주요 거시지표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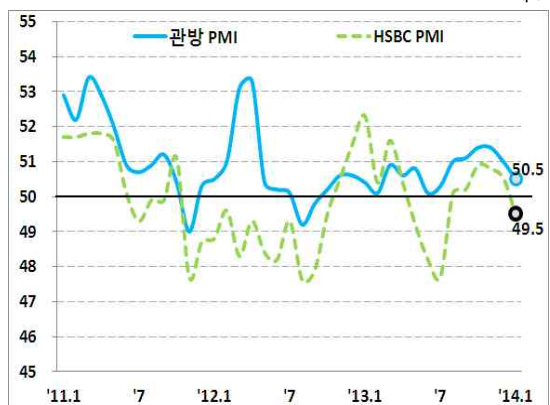
구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2013년	2014년
GDP	9.9%	10.5%	7.7%	7.6
소비	18.0%	15.9%	13.1%	13.5%
투자	13.5%	27.3%	19.6%	20.0%
수출	14.9%	21.2%	7.9%	8.0%
CPI	6.5%	3.0%	2.6%	3.3%
통화량	15.3%	18.1%	13.6%	14.0%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銀行國際金融研究所 中國經濟金融展望(2013.12) 참고.

주 1. 2014년을 제외하고 실적치 기준.

2 장쩌민 정부의 투자는 1995-2002년 사이, M2는 1998-2002년 사이 평균치 임.

< 중국 관방 및 HSBC PMI 추이 > (p)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주 : 관방 PMI는 국유기업 중심, HSBC PMI는 중소 민간기업의 업황을 대표.

2) 중국은 정보소비(信息消費) 규모를 2015년까지 연평균 20%씩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에너지절감 제품 소비 촉진을 계획하고 있음.

② 산업 구조 재편 : 과잉투자 해소, 서비스·신흥산업 육성

- 과잉투자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IT 등 고부가 신흥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 고도화 추진

-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

- 지난 2013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 5대 주요 과잉투자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침 제시
- 중국 국무원은 해당 5대 산업에 대해 보조금 축소, 엄격한 산업투자 표준선 도입 등을 통해 과잉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할 전망

< 중국 주요산업의 과잉투자 해소에 관한 세부 정책 >

구분	주요 내용
철강 (72.0%)	- 2015년까지 제철, 제강 분야에서 각각 1,500만 톤 생산 축소 계획 - 가공무역 내 철강재 보세정책 취소
시멘트 (73.7%)	- 1억 톤 이상 생산 가능 설비 폐쇄 계획 - 고성능 시멘트 및 콘크리트 사용 및 개발 권장
알루미늄 (71.9%)	- 2015년까지 16만 암페어 이하의 저효율 소성양극(pre-baked anode) 시설 폐쇄 계획 - 2016년부터 톤당 액체 알루미늄 교류전력 소모량이 13,700kwh 초과 시 전력사용료 10% 인상
판유리 (73.1%)	- 2015년까지 2,000만 상자(Weight Box) 파기 (약 100만 톤) 계획
조선 (75.0%)	- ERP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생산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선박제품 수준 향상 - 업계 M&A 등 구조조정 적극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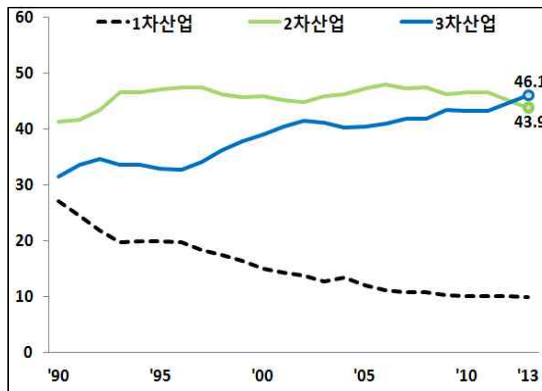
자료 : 國務院關於化解產能嚴重過剩矛盾的指導意見(2013.10).

주 : ()는 2012년 설비가동률. 가동률이 낮을수록 사용하지 않는 설비가 많음을 의미함.

- 또한, IT산업 등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

- 중국은 2013년부터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을 추월하는 등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
- 특히, 지난 2013년 12월 중국공업정보화부(中國工業信息化部)는 4G 서비스 인프라에 약 1,000억 위안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고부가 IT 산업 육성 가속
- 더욱이 최근 1월에는 주요 도시에서 E-commerce, 4G,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IT 프로젝트 계획도 발표

< 1,2,3차 산업의 GDP 대비 비중 >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 최근 중국 IT산업 관련 투자 정책 >

구분	내용
스마트 그리드	- 관련 인프라 2조 위안 투자(2011~2015) - 관련 R&D 1.7조 위안 투자(2016~2020)
통신망	- 브로드밴드 차이나 추진 계획(2013) - 20만개 LTE 기지국 추진 계획(2013) - LTE관련 800억 위안 투자 계획(2013) - 4G인프라에 1,000억 위안 투자 계획(2013)
기타	- 전자상거래 등 산업 활성화 계획(2014)

자료 : 中國工業信息化部, 中國電信, 中國聯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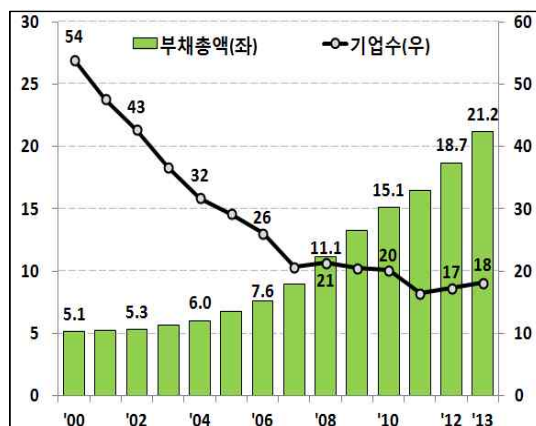
③ 국유기업 개혁 : 국유기업의 민간자본 유치 확대

○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민간자본 유입 허용범위를 확대할 예정

- 독점, 부실경영 등 국유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
 - 중국의 국유기업수는 지난 2000년 5만 4,000개에서 2013년 1만 8000개로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부채규모는 동기간 약 5조 위안에서 21조 위안으로 4배 급증
 - 더욱이, 기득권 계층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되면서 지난해 3중전회에서 민영화 확대 등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채가 심각한 철도부 해체, 국유기업의 독과점 방지 등 국유기업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적극 추진

< 중국 국유 제조기업 부채 및 기업수 >

(조 위안) (천 개)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財政部.

< 최근 중국 국유기업 주요 개혁방향 >

구분	내용
국유기업 민영화	- 철도분야 민자 유치 - 비(非)국유자본의 지분참여 허용 - 중국석유화학공사(SINOPEC), 최대 30%까지 민자 참여 허용 - 2020년까지 대부분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로 전환 계획
공공서비스 가격 시장화	- 물,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등 부문 가격 시장화 전환

자료 : 中國國務院.

④ 신형 도시화 추진 : 호구제도, 토지보상제도 등 수정

- 스마트 도시 등 혁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호구제도, 건설용지 확보 등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될 전망
-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난 12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51.5% 목표를 이미 상회
 - 지난 2010년 도시화율 49.9%로 11차 5개년 계획이 목표한 도시화율 47.0%를 상회했으며, 2013년은 53.7%로 12차 5개년 계획 목표치 51.5%를 이미 상회
- 특히 도시화 유형은 동-서, 남-북으로 공간을 토대로 2015년까지 스마트 도시 확대³⁾ 등 IT 융합형 신형도시화 계획을 추진
 - 중국주택건설부(中國城鄉建設部)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13년 103개 도시(2013년 8월 기준)에 대해 스마트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⁴⁾
 - 더욱이 오는 2015년까지 약 320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약 5,000억 위안의 투자가 예상됨

< 중국정부의 도시화 계획 >

구분	10차 5개년 계획 (2001-2005)	11차 5개년 계획 (2006-2010)	12차 5개년 계획 (2011-2015)
전략	- 호구 및 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화 장애요인 제거	- 도시군 전략	- 도시군 전략 - 스마트 도시 조성
규모	- 소도시 중심	- 대중소 도시 균형	- 대도시 중심 소도시 융합
지리적 유형 ⁵⁾	- 구체적 유형 생략	- (서로축) 연해, 징하징광 - (가로축) 장강-롱하이	- 양횡삼종(兩橫三縱)
도시화율	- 구체적 목표 생략	- 47.0%	- 51.5%

자료 : 中國國務院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도시군이란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 분포한 도시집합체를 의미.

3) 스마트형 도시(智慧城市)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통신, 빅데이터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접목된 IT 융합형 신형도시.

4) 지난해 9월 중국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발표한 《物聯網發展專項行動計劃(2013-2015)》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규모는 약 7,500억으로 연평균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5) 징하징광(京哈京廣)이란 베이징-하얼빈, 베이징-광저우 등 경로를 말하며, 양횡삼종(兩橫三縱)에서 양횡은 루치아오 및 장강 경로 등 2개의 횡축과 연해, 징하징광, 바오쿤 경로 등 세 개의 종축을 의미.

-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시된 농민의 토지사용권 보상뿐 아니라, 건설용지 확보의 복잡성 등 도시화를 지연시키는 장애 요인 해결이 지연
 - 수용 농지의 농민의 받는 토지보상금⁶⁾보다 지방정부가 토지출양금으로 얻는 수익이 10배 이상으로 토지 수용된 농민의 도시안착이 사실상 불가능
 - 더욱이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을 토지사용권 배분 중 출양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토지공급이 감소⁷⁾
- 더욱이 중국정부는 농민공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시민화를 위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등 해결해야할 난제 상존
 - 최근 도시에 상주하고 있는 농민공에게 실제 도시민 자격을 허가하는 등 도시화 확대를 위한 호구제도의 관련 정책 추진
 - 하지만, 농민공을 도시민으로 편입시키는 데 투입되는 비용 확대로 중국정부의 재정압박 가중 가능성이 확대⁸⁾
 - 이에따라, 중국정부가 2015년까지 도시호구를 취득한 농민공을 포함한 실질 도시화율 51.5% 달성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논의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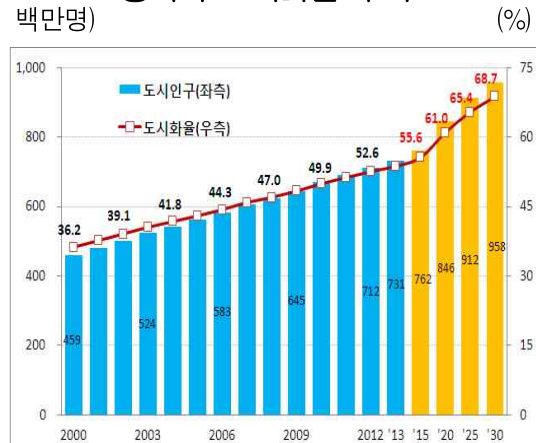
< 중국 도시화 추진의 장애요인 >

구분	도시화 저해요인
토지보상	- 수용 농경지에 대한 불평등 보상
건설용지 확보	- 건설용지용 토지 공급 감소
호구제 수정	- 농민공의 도시민화 비용 증대

자료 : 중국국토자원부 등 관련자료 종합.

주 : 수용(徵地)이란 농촌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

< 중국의 도시화율 추이 >



자료 : CEIC, UN.

주 : 2000-2013년까지는 실적치, 2015-2030년은 UN(2011) 예측치.

6) 토지관리법(2004)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해당 농경지 수용 전 3년 평균 농작물의 9-10배, 이밖에 토지가 수용된 농민의 새로운 정착을 위한 보조비 역시 3년 농작물의 4-6배로, 두 항목을 합친 보상금은 농작물 가치의 30배로 제한.

7) 지방정부는 토지 수용가와 출양가의 차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으나, 도시화 심화로 비축토지 감소로 이어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감소로 도시화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8) 중국건설부(中國建設部課題組, 2006),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國發展研究基金會, 2010),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中國國務院發展研究中心課題組, 2011) 등 주요기관 분석에 따르면, 농민공 1인당 시민화 비용은 약 8-10만 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 대외개방 전략 : 대외개방 전략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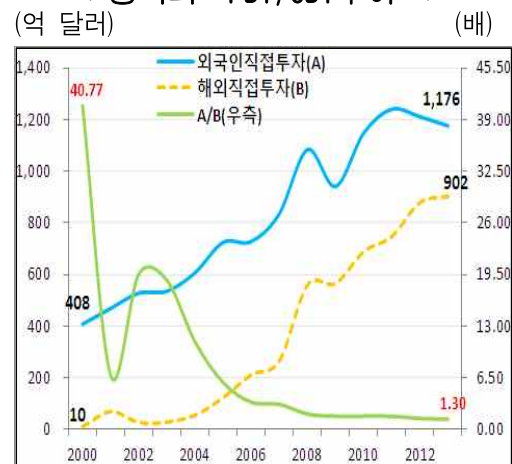
- 외자유치 전략 수정,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대외개방 모델 전환이 빠르게 진행
 - 최근 중국은 세계 금융 및 물류 허브 전략의 일환으로 상해자유무역시범구⁹⁾ 출범 등 내수확대를 위한 개방 확대
 - 중국정부는 지난 1978년 성장고도화를 위한 대외개방이었다면 최근 상해자유무역지구시범구 등 개방모델로 전환
 - 지난해 10월부터 중국내 최초로 상해를 중심으로 출범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는 내수확대를 위한 모델로 전환
 - 더욱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성장 지향적 대외개방에서 해외직접투자 확대 전략으로 빠르게 전환
 -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2000년 408억 달러에서 2013년 1,176억 달러로 지난 13년간 약 3배 증가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감소
 -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동기간 10억 달러에서 902억 달러로 약 90배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조 8,000억이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앞세워 향후 해외 M&A 가속화 전망

< 중국의 대외개방 모델 비교 >

구분	기존 유형 (1978~2013)	전환 유형 (2014~)
모 델	전략 - 성장지향	- 개방형
	핵심 - 제조업 중심	- 서비스업 + 제조업
정책	- 경제특구 - 외자유치	- 자유무역지대 - 해외 M&A 확대
조치	- 세제혜택	-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제도 마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의 FDI/ODI 추이 >



자료 : CEIC.

주 : FDI는 2000-2001년은 UNCTAD,
2002-2013년은 중국상무부 기준.

9) 상해자유무역시범구(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는 2013년 8월 중국국무원의 정식 승인을 얻어 출범한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등 기존 4개의 보세구를 자유무역지대로 승격하여 금융, 항만, 무역, 사회, 문화, 전문 등 총 6개 서비스분야의 18개 세부 항목에 대한 개방을 목표로함.

3) 대외경제 협력 : 경제협력 전략 다원화

- 향후 대외경제 협력 전략이 기존 아시아, 유럽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로 다원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그동안 아시아 중심의 FTA 체결을 진행하는 등 확실적인 대외협력 전략 지속
 - 2003년 홍콩 및 마카오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시작으로 2013년 스위스 등 12개 지역 및 국가와 FTA를 체결
 - 최근에는 호주, 노르웨이뿐 아니라,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7개 지역 및 국가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시아 개도국 중심의 협력 지속
- 하지만, 최근 미국 등의 TPP¹⁰⁾ 참가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아시아 중심의 경제협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양상으로 전개¹¹⁾
 - 미국이 주도하는 TPP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3년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참여 의사 등 중국의 동북아 협력 전략에도 큰 변화 출현
 - Petri, Plummer & Zhai(2013)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일본 등이 TPP에 가입 시 중국은 2025년까지 GDP 468억 달러(전체 GDP의 0.3%)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

< 주요 국가들의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 >

(단위 : 10억 달러, 2007년 불변가격 기준)

구분	2025년 GDP	GDP 증감 효과		수출 증감 효과	
		TPP(1)	TPP(2)	TPP(1)	TPP(2)
미국	20,273	77.5 (0.4%)	108.2 (0.4%)	124.2 (4.4%)	190.5 (6.8%)
중국	17,249	-46.8 (-0.3%)	-82.4 (-0.5%)	-57.4 (-1.2%)	-107.8 (-2.3%)
일본	5,338	119.4 (2.2%)	128.8 (2.4%)	175.7 (14.0%)	202.5 (16.2%)
한국	2,117	45.8 (2.2%)	50.2 (2.4%)	88.7 (12.4%)	94.5 (13.2%)
세계	103,223	294.7 (0.3%)	450.9 (0.4%)	443.7 (1.6%)	654.7 (2.3%)

자료 : Petri, Plummer & Zhai(2013).

주 1. 추정에는 TPP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와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효과 고려. 이 때 각 변수별 변화는 최근 미국이 체결한 5개 FTA를 참고 단, ()은 증감률을 나타냄.

2. TPP(1)은 일본이 2013년, 한국이 2014년 중 TPP 타결 가정. TPP(2)는 2013년 중에 일본, 2014년 중에 한국, ASEAN3(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이 TPP 협상 타결 가정.

10)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란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 국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현재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 전세계 GDP의 40%, 전세계 교역의 30%에 이릅니다.

11) 2013년 12월, 중국상부무는 미국주도의 TPP 가입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3. 시사점

- 성장감속, 대외개방 모델 전환 등 향후 중국경제에 나타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필요
 - 첫째, 중국경제의 성장 감속에 대비한 대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모색
 - 향후 중국경제가 성장의 질적 전환을 전제로 한 성장 감속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부품중심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 모색
 - 아울러 소비재 등 내수확대를 겨냥한 품목 다변화 전략도 필요할 뿐 아니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구매력이 높은 신흥국시장 개척 필요
 - 둘째, IT 등 고부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한 대중국 경쟁력 강화 및 기회 활용
 - 최근 중국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나, 스마트그리드, 4G, 전자상거래 등 IT 관련 신흥산업 육성 가속화
 - 이에 따라, IT 강국인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대중국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낙후된 세부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기회 마련 필요
 - 셋째, 스마트형 신형 도시화 가속에 대비한 인프라 건설 참여 기회 마련
 - 향후 중국의 주요 거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IT 융합형 신형도시화 확대를 겨냥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기회 모색
 - 특히, 도시화에 필요한 도시 교통시스템이나 공항 및 항만 운영에 관련된 전산시스템 등 맞춤형 인프라 솔루션 개발 전략 구축 필요
 - 넷째, 서비스업 개방, 해외 M&A 확대 등 대외개방 전략 전환에 대비
 - 최근 중국은 상해자유무역시범구 출범 등 서비스 개방은 적극 활용하되, 해외 M&A 가속 등에서는 주요 제조업 분야의 기업경쟁력 강화도 필요
 - 다섯째, 한중 FTA 등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내에서의 경제 입지 확대 모색
 - 최근 중국은 FTA 등 기존 대외 협력 전략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RCEP, TPP 등 새로운 협력 방안을 동시에 고려 예상
 - 또한, 한중 FTA 등 대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최근 일본의 TPP 참여, 영토분쟁 등으로 자칫 약화될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 **HRI**

경제연구본부 천용찬 연구원(2072-6274, junius73@hri.co.kr)

한재진 연구위원(2072-6225, hzz72@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연간(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3.7	2.0	1.5	2.3	3.3	3.9	2.8	3.8
	민간소비(%)		2.4	1.7	1.5	1.8	2.1	2.2	1.9	2.7
	건설투자(%)		-4.7	-2.2	2.4	7.2	8.6	8.1	6.9	2.5
	설비투자(%)		3.6	-1.9	-11.9	-4.6	1.5	9.9	-1.5	6.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 \$)		261	481	100	198	190	220	707	49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308	283	56	144	108	133	441	370
		수출(억 \$)	5,552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6,067
		증감률(%)	(19.0)	(-1.3)	(0.4)	(0.7)	(2.7)	(4.7)	(2.1)	(8.4)
		수입(억 \$)	5,244	5,196	1,297	1,267	1,260	1,331	5,156	5,697
	증감률(%)	(23.3)	(-0.9)	(-3.0)	(-2.8)	(0.3)	(2.5)	(-0.8)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2.2	1.6	1.2	1.4	1.1	1.3	2.4
실업률(%)			3.4	3.2	3.6	3.1	3.0	2.8	3.1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7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